

예술교육 실패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으로 보호하려는가

조희문 | 상명대 교수 ·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공동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운영을 바탕으로 한 자성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시해야 하며 문화부 또한 한예종의 운영과 예술교육 성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은 채 특별법 제정을 또 다시 시도한다면, 국고 예산과 온갖 편법적 특혜를 독점하는 반문화적, 반예술적 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시도하고 있는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은 각 조항의 해석이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석·박사 배출이 가능한 대학원 과정을 둔 국립예술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예종의 이 같은 시도는 두 번 실행단계로 접근했다.

첫 번째는 1999년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안’의 제정을 시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을 다시 제정하려 한 것이다. 첫 번째 시도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좌절되었고, 두 번째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묻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표현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법안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 국내 예술대학 학생과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이라고 보는 어렵다. 한예종 측은 또 다시 기회를 보아 법안 제정을 시도할 것이고, 일반 대학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예종 측은 어떠한 비전이나 타당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예술교육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 같은 정부 주무부처는 수수방관하며 예술교육의 현실이나 성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전국 예술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저지 운동에 나선 데 이어 6월 22일에는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라는 단체를 출범시켰다. 전국의 국·공·사립 대학의 연극, 무용, 영화, 음악, 국악,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등 각 장르별 예술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한예종이 현재의 실기 중심 전문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종합교육을 실시하며 이론 과정의 석·박사 학위까지 주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과정의 실패를 교묘하게 호도하며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음모적 전략이다.

예술교육의 방향과 정책운영 등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논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한예종 설립취지에 맞게 나아가야

한예종은 영재를 발굴하여, 학위 중심의 기존 대학과 다른 대한학교로서 학벌주의, 학위주의 병폐를 깨는 실기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과정이다. 지난 1993년, 음악원을 개원한 이래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 원으로 확장하며 12개 전공에 380여 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4년제 교육과정(예술사 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2년제 교육과정(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과의 교류나 진학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확장될수록 전공의 교육과정의 중복, 실기와 이론 영역의 혼재로 인한 특성화의 약화를 드러내고 있다. 한예종은 어느 사이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실기과정과 이론과정을 두루 갖춘 종합교육기관의 모습으로 변모해 버린 셈이다. 박사과정까지 설립하려는 것은 한예종이 실기보다는 이론 전공의 교육기관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예종의 존립 이유가 모호해지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실기교육기관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공의 중복 문제는 문화관광부의 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다. 무용원은 실기와 내에 한국무용 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통예술원이 설립되면서 그 안에 무용과를 다시 설치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전공이 만들어진 것인데, 문화관광부는 감사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무용원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2004년까지 무용원 실기과의 한국무용 전공과 전통예술원의 무용과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각각의 전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예종 측의 개선의지도, 문화관광부의 합리적 구조조정 의지도 없이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표1〉 한국예술종합학교 교과과정

(2005년 6월 현재)

구분	전통예술원 무용과	무용원
전공필수	한국무용사/서양무용사/한국음악의 이해/무용안무/무보독해/한국무용미학/공연실습 1/무대론	실기과: 고급실기(한국무용)/중급실기(한국무용)/무용음악실습(한국무용) 창작과: 한국무용/음악기초문법/무용음악연구/인무원리 이론과(무용이론): 무보법개론/무용미학 1/한국무용학원전강독/동양미학/민속학/미학사/한국무용문헌실습/동양무용사
전공선택	분장실기/연기실습/한국민속문화의 이해/창사실습/기수련/한국공연예술의 역사/무용의상/동양무용 비교연구	실기과: 무용레퍼토리(한국무용)/전통연희/인무실습/무용음악실습(한국무용) 창작과: 한국전통민속/한국의 전통과 예술이론/한국무용 이론과: 서양무용사 2/무용미학/한국의 전통과 예술이론/한국무용사 2/무속문화와 예술

▶ 교과과목 중 전통예술원과 무용원의 유사한 개설과목만 기재하였음

이보다 더 방만한 부분은 실기 중심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론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점이다. 한예중은 실기 위주의 영재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미술원, 무용원, 전통예술원 등에 이론과를 두거나 전공 단위 안에 이론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전문사 과정의 경우는 대부분의 전공을 이론 과목으로 채우고 있다. 영재를 발굴해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실기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갔다는 애초의 구상은 무용지물이 된 채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구색을 갖춘 '종합교육 학교'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순수이론 과정 개설 현황 (2005년 6월 현재)

이름	학과 및 전공(예술사 과정)	입학정원	학과 및 전공(전문사 과정)	입학정원
음악원	음악학과	5명	음악학과 (음악학 전공) (음악사 전공) (음악이론 전공)	6명
연극원	극작과(서사창작 전공)	5명	극작과(서사창작 전공)	3명
	연극학과 (연극학 전공) (예술경영 전공)	5명 5명	연극학과	10명
영상원	영상이론과 (영상이론 전공) (영상기획 전공)	10명	영상이론과 (영화이론 및 영화사) (한국 및 동아시아 영화 연구) (영상문화이론)	10명
무용원	이론과 (무용이론 전공) (예술경영 전공)	5명 5명	이론과 예술경영과	10명 10명
	미술원	미술이론과	미술이론과	10명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10명	한국예술학과(예술사학 전공)	6명

이같은 문제점은 한예중의 구성이 재능 있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예술적 기량과 성취가 좌우되는 음악, 무용 분야 외에 연극원이나 영상원 같은 그룹 창작의 성격이 강한 분야들을 포괄하면서부터 구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장르는 특정한 개인의 기량만으로 작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조기에 영재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한예중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예중의 특별법 제정은 반문화적, 반교육적 시도

한예중 설립 후 12년이 지난 현재, 예술실기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설립 목적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한예중 측은 국제적 규모의 콩쿠르나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몇 개의 경우를 교육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재인력은 국내에서 수학하기보다는 외국의 유명대학이나 콘서바토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국내 예술계의 저변 확대에 한예중이 두드러지게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당초 설립 목적에 부응할 만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도 실기교육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새로운 원을 설치하는 일을 계속해 왔으며, 이론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스스로 일반대학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모순적 관행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

이미 한예중은 일반대학들과의 차별을 찾을 수 없는 무력한 교육시설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라면 한예중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필요도 없다. 전액 국고 예산으로 운영되며 학생 선발, 교수 채용, 독자적인 교과 과정의 운용 등에서 편법적 특혜를 누려온 한예중이 운영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분석, 반성도 없이 정규대학 과정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갖춘 국립대학

으로 전환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빛나간 권한과 위상을 무모하게 확보하려는 반문화적, 반교육적 시도일 뿐이다.

한예중은 이미 1999년에도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다 전국 각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한 전력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한예중이 시도한 관련 법안에 대해

1. 전문학위 외에 학술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국립대학과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이 없어지게 되므로 현재 국립대학을 통합 운영 내지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측면에서 또 하나의 국립예술대학교를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2. 전문학위 제도는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의해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기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전문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취지라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서도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3. 별도의 대학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개별대학 설치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단행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정부조직법 제33조의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법제정에 반대했다.

이 같은 지적과 문제점은 2005년 현재 시점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다만 법안의 명칭만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에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다. 교육법의 근간까지 흔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각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한예중은 교육부의 관리도 받지 않으면서 예산과 기구, 학생 선발, 교수 채용 등의 모든 업무에서 특혜적인 독자운영이 가

능한 특별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더욱 집요하게 하고 있다. 법이 새로운 파행의 근원이 되고, 부당한 조직과 기구를 보호하는 방패 노릇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법이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전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패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한예중이 현재의 실기 중심 전문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종합교육을 실시하며 이론 과정의 석·박사 학위까지 주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과정의 실패를 교묘하게 호도하며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음모적 전략이다. 국고 예산은 물론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개편, 학생 선발과 교수 임용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이론 중심의 석·박사 학위까지 갖추려는 것은 국내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예중만의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시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저한 정책적 실행이 필요

한예중을 종합 예술대학으로 전환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두 번의 논란을 겪는 동안 일반대학 교수들이 더욱 당혹했던 부분은 교육부나 문화부 어느 쪽에서도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방향이나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구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국내 예술대학의 교육적 현황이나 발전방향 등에 납득할 만한 구상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란 자체를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일관했다.

특히 한예중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 또한 학교측의 움직임을 방관하거나 묵시적인 지지를 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예술대학 교수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문화부는 한예중에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을 확인해야 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행정 감사를 시행한 것 외에 한예중의 운영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예종의 설립 이후, 왜 이 학교를 설립했는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예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일반 대학들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한예종 측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 동안 국내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 양성 교육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전국 각 대학들이 그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화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 같은 정책적 실행 없이,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 수요와 공급, 한예종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 정부와 민간 교육의 역할분담이 어떤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국립예술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예종의 자기보호적 노력, 문화예술인을 자처하며 문화정책의 방향을 선동적 문화운동으로 끌고 가려는 집단의 은밀한 전략,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또는 기만적 방조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진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교육 및 진흥정책이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소수 특정집단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집중된다면 그것은 문화예술 교육의 파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우월적 배타성으로 포장된 문화 권력을 법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그 같은 현상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 일반대학들이 추구해온 예술교육

의 다양성은 급속하게 획일화되고 황폐화될 것이 분명하다.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한예종 측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위확보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 같은 시도 자체를 비난하거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할 의도는 없다. 그 같은 논의가 재개된다면 그것은 한예종 내부만의 논의에 따른 주장을 먼저 앞세우며 비밀스런 작전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교육 전체를 두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며, 무엇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예종 측에서도 그 동안의 운영을 바탕으로 한 자성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시해야 하며 문화부 또한 한예종의 운영과 예술교육 성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은 채 한예종의 지위만 바꾸는 특별법 제정을 또 다시 시도한다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대학들의 예술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한예종을 실기교육의 명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고 예산과 온갖 편법적 특혜를 독점하는 반문화적, 반예술적 기관으로 둔갑시키려는 헛된 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